경제 양극화의 정치경제학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경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경제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물 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중화학공업과 경공업·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 부문간에,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종별이나 지역간 고용과 임금 및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 경제의 개방이 확대되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부문간 성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 양극화는 국내 경제 각 부문간 단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단절 현상까지도 심화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경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부문간 연계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세계화가 된 중화학 공업이나 IT 부문은 해외 부품과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 분야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나가면 산업간이나 기업 규모별 연결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경제 활동의 연계 역할을 하는 기계 부품 산업과 중소기업의 기반이 와해되는 것이다.

경제 부문별 단절 현상은 경제적 중산층을 붕괴시켜 정치 사회적 완충 지대마저 사라지게 한다. 요즈음 계층이나 지역간에 국내 정치와 사회 문제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경제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 수준별 그리고 지역별 경제 분리 현상이 행정 수도 이전이나 부동산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교 등급제 논란 역시 사교육비라는 경제적 능력의 양극화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최근 실적을 보면 최상위 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하위층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양극화의 또 다른 문제는 해결책이 상충된다는 데 있다. 성장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자원의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원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취약 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문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원리를 강화하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고충을 감내해야 하고,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배 정책에 역점을 둔다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성장과 분배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데는 이같은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동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경제가 1만 달러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부문간 연결 관계를 충실히 맺게 할 수 있는 부품 기계 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육성 방법은 무분별하고 일시적인 정책적 지원보다는 치열한 경쟁 유도를 통한 기업 체질 개선이 경제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